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(7.24.)

□ 지금부터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
제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- 어제(7.23일) 발표된 **24분기 GDP**는 전기 대비 **0.6%** 증가하며 1/4분기(1.8%)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금번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**3% 성장**과 **1인당 국민소득(GNI) 4만불**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
- 이를 바탕으로 **3·4·5 비전**, 즉, 잠재성장률 3%, 수출 4강, 국민소득 5만불 실현에 **총력**을 다하겠습니다.

□ 다만, 최근 **중동전쟁**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**국제유가가 상승**하고, **변동성이 높아**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**철저히** 대비해 나가겠습니다.

- 우선, 내일 **7.25일 0시부터** 적용될 **8차 최고석유가격**은 민생부담 **최소화**를 목표로, 국제유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서 **오후 7시에 발표**하도록 하겠습니다.
- 특히,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**9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**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□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물가·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**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(3.25~)**하여 **총력**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.

- 그 결과 **나프타, 요소** 등 주요 원자재의 **수급여건**이 개선되고, **물가상승률**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**낮은 수준**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

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, 3~6월 평균): (韓)2.8 (유로존)2.9 (美)3.7 (OECD)4.3<3~5월>

- 또한 6.26일 「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」을 발표한 이후 석유 최고가격의 인하 및 먹거리 공급확대, 할인지원 등에 힘입어 민생밀접 품목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

* 석유제품 가격(원/ℓ): (6.26)휘발유 2,006, 경유 1,997 → (7.23)휘발유 1,871(△135), 경유 1,856(△141)
주요먹거리 가격(6.30→7.22일): <계란> 7,583→7,339원/30개(△3.2%), <고등아> 3,107→2,946원/1마리(△5.2%)

- 2개월 연속 3%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%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
□ 그러나, 향후 물가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·폭우 등 기상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.

-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□ 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, 원자재 등의 수급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.

- 현재 정부는 총 2억 3천만개의 신선란 수입계획 하에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1억 161만개를 계약하고 5,224만개를 수입 완료하였습니다.

-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계약도 신속히 마무리하고, 수입한 신선란은 8월 초까지 주당 약 2천만개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*하여 계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* (7.4주) 1,734만개 → (7.5주) 1,995만개 → (8.1주) 2,282만개

- 고등어는 특사단 파견(7.6~7.17)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산 2천톤 직수입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.

- 이에 더해서, 8월까지 영국·노르웨이 등에서 1,200톤 수입계약을 추가로 추진해서 고등어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.

- 한편,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보이는 요소·요소수에 대해서는, 중동전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8.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- 8.31일까지 시행하는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는,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, 판매량 제한은 해제토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이번 중동전쟁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하여,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
- 특히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시 제재 강화, 압수물품에 대한 선제적 매각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겠습니다.
- 하반기 확대한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,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